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Newsletter

December 2012 **Vol. 41** 12

이달의 issue

KRILA 논단
2013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

Interview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CONTENTS

이달의 issue 2013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

4 ● 권두언
지방자치의 성과와 향후과제

6 ● KRILA 논단
2013년 지방행정의 전망과 과제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재정운영 방향
2013년 지역발전의 전망과 과제

18 ● Interview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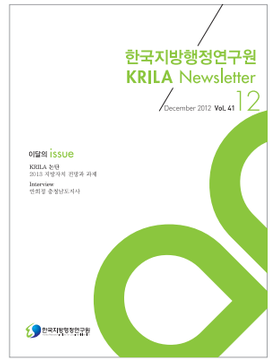
22 ● 자치단체탐험
마음까지 녹여주는 따스한 고향 충청남도

● 자치단체우수사례 24
청정한 자연환경과 향토문화가 어우러진
장수의 고장, 순창

● 도시통계 28
지방자치 정도 추이

● 연구원 동정 31

● 알림마당 31



12 December 2012 **Vol. 4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41호
발행인 / 한 표 환
편집인 / 뉴스레터 위원회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Newsletter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지방자치의 성과와 향후과제



한 표 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2012년 한국의 지방자치는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와 새로운 과제들이 맞물려 다른 어떤 해 보다도 조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 해 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과제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지방행정' 부문의 경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편안을 마무리하여 대통령 보고를 마쳤습니다.

개편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본틀에 대한 패러다임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에 기초하여 2014년까지 완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체제개편과 맞물려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자치경찰제의 도입 및 교육자치의 개선 등이 향후에 논의되어야 할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부 정비가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중복사무를 제거하고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도 · 하천분야, 해양 · 항만분야, 식 · 의약품분야 등 주로 3개 분야 중심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실행하였는데, 이는 참여정부에서 계획수립 단계에만 머물러 있던 것을 일부나마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91년에 출범한 지방의회의 경우, 주민대의기관으로써 집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정책 제안을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의회의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의 능력함양과 전문성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부문의 경우,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 속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재정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한 편으로는 재정분권을 촉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지방재정 환경 속에서 재원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재정을 접근하여 세원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세원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로 적용하고, 세목체계를 간소화하고, 지방소비세를 차등배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재원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선 및 포괄보조금제의 운영, 도시계획세의 자치구 이관,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반영 등 정부시책과의 연계, 지방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 대응 등의 추진이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감세기조의 유지와 세제개편 등으로 지방세입이 감소되고 있고, 지방세입 감소분을 보전할만한 지방재정 확충 과제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현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지방 성인지예산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니 만큼 이에 대한 준비와 관심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부문의 경우, 광역 차원에서 시도간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광역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기업 · 대학 · 연구소 · 지원기관이 긴밀하게 연계된 협력형 추진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와있고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기업지원과 연계한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유치 및 육성과 투자유치, 고용창출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내년 2013년에는 더욱 분권화되고 다원화된 사회로의 진입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및 동남아시아인의 유입 등으로 다민족, 다문화 현상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실업문제가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될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감소하지만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1-2인 가구수는 급격히 증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해에는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지방이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여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3년 지방행정의 전망과 과제



금 창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Ⅰ. 서언

2013년은 지방행정에 획기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금년 12월 19일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위한 각 후보진영의 공약에 따르면, 지방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시점에서 예견되는 제도적 변화들도 직간접적으로 지방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들 사전에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2013년 지방행정의 전망

2013년에 지방행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적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변수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정부가 제시하게 될 국정과제이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는 금년 12월의 대선을 거쳐 선출되는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지방행정에 관련된 공약들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에서 구체화될 국정과제를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공약들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에 관한 국정과제를 예측해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회의원의 정당공천 배제이다. 이는 주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치혁신의 전략이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종래에도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는 현행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더욱이 2014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3년에는 법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정책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금년 6월에 시군구통합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및 통합 자치단체·대도시 특례에 관한 개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편계획 가운데 지방행정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내용으로는 시군통합과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의 개편이다. 시군통합의 경우 16개 지역의 36개 시군이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은 현행의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서 행정구 및 군으로 개편됨으로써 하부행정기구로 전환된다. 따라서 해당지역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이 2014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정책의 확정은 대부분 2013년에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행정 수요의 변화이다. 인구구성의 변화와 동시에 정책적 측면에서 지방행정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의 전하는 최근에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서 금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13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들이 정책내용으로 수용되고, 지방행정의 운영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러한 지방행정의 수요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별 비중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가시적 산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Ⅲ. 2013년 지방행정의 대응과제

전술한 변수들은 각각의 특성에 근거하여 2013년에 걸쳐 지방행정에 다소의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과제로 구분하면, 보완적 과제와 선도적 과제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완적 과제는 기존의 운영과정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고, 선도적 과제는 향후 지방행정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다.

우선, 보완적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다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의 증진과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대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 원인이 적절히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수가 지적하는 문제들이 보완적 과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로는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학계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다수의 정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계층과 구역의 개편, 기능의

재분배, 지방분권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방안, 주민참여를 위한 근린자치의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자치경찰제의 도입, 교육자치의 개선 등의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지난 20년의 민선자치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현재까지도 개선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대안을 일정수준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과제들이다.

한편, 선도적 과제들은 향후의 지방행정 수요전망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적정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가운데 일부 과제들은 현재시점에서도 이미 대응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적극적인 행정수요로 제기될 변화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특성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제도특성에서는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의 다양화가 그리고 수요특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수요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미래의 행정수요는 각각의 수요특성에 기초한 정책적 대응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정착,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제도의 다양화, 효율적인 광역행정제도의 마련이 대응적 차원에서 역점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통일대비정책도 대응과제로 간주된다. 다만,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정책은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각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에는 구체적인 실천대안에 대한 모색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선5기 이후에 4대강 사업 등의 국가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되었던 정책갈등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생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협력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의 역사도 20년이 경과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획일적 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대응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와 재정운영 방향



이 삼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Ⅰ. 서론

현 정부의 집권초기 재정정책은 감세정책을 핵심으로 시장지향적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금융위기를 맞아 정책을 전면 전환하여 재정조기집행 등 적극적 시장개입 재정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전반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저성장 기조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내국세의 감소는 곧 바로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연결되고, 경제의 침체는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의 급격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방재정 역시 과거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앙재정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듯 국가전반적인 침체기에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적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인 바, 중앙과 지방의 재정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묘책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하는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기초로 적절한 제도적 틀을 갖춤으로서 중앙대 지방의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적 편익제고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최병호a, 2012:71).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세출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지방세수의 획기적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핵심이며 최근의 지방재정이 경직화되는 주요 요인인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확대 또는 국고보조율의 인상보다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체계에서 중앙과 지방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지방세입이 매우 열악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Ⅱ.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와 과제

지방재정을 둘러싼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상호 연계된 체제 하에서 작동하며, 이 경우 경제적 요인은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한편 중앙정부의 세수입에 영향은 다시 지방교부세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방재정에 2중의 부담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향후의 경제환경에 대한 분석은 지방재정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과 함께 유로존의 불안, 선진국 재정긴축 등의 하방위험도 상존(기획재정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의한 수출 확대,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3%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KDI 경제전망, 2012년 9월)되나, 글로벌 수요의 제약으로 인해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LG경제연구원, 2012. 9)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전망수치는 2000년대 평균성장률인 4%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1〉 2013년도 한국경제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전망 기관	경제성장률	전망 일자
정 부	4.0	2012. 9. 25(정부예산안)
한국은행	3.2	2012.10
K D I	3.4	2012. 9.17
LG경제연구원	3.3	2012. 9
I M F	3.6	2012.10
OECD	4.0	2012. 5
10개 투자은행 평균	3.6	2012. 8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증대하고 이러한 현상이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방의 자체재원 증대 요구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재정정책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 증대의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 재정지출 수요증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전재원 중심의 이러한 방식은 지방재정의 중앙재정 의존구조를 심화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한다는 반성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실제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중앙재정 주도형에서 지방재정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정부간 재정관계의 축이 조세제도에서 재정이전제도로 변경되었다. (임성일, 2012: 249).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말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 조정 등으로 정부의 보조금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최병호b, 2012:39).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의 자체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해결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전재원 중심의 정책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정책의 중심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역시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재원의 효율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분권의 요구는 지방의 자체재원 증대 요구와 더불어 국고보조금의 체계 개선 요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지방재정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다시말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팽창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으나, 아직 노인에 대한 연금지출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또 보건, 의료비용 역시 상승초기에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밖의 사회지출분야(장애자, 가족, 실업, 노동, 주택) 역시 향후 세출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재정의 상대적 위축문제가 향후 지속적인 재정정책의 현안이 될 수 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작업반. 2012:32-33).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 대부분의 후보가 사회복지사업의 증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후보들의 주요복지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26.5조-33.5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동아일보 2012년 11월 13일). 사회복지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이에 대응한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Ⅲ. 지방재정 운영방향

지방재정이 갖고 있는 문제는 재정지출수요는 급격히 팽창하는데 이에 대응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중앙과 지방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발생한 것이 아닌 오래전부터 상존해오던 현상이나, 경제침체, 사회복지사업의 증대 등 현 시점에서 예견할 수 있는 현상 만으로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하는 방안은 시각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으나,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더불어 재원지출의 효율화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체계의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지방재정의 확충이다. 지방분권 하에서 지방재원조달의 근간은 조세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다양한 수단중 이전재원 중심의 재원조달 방식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의 왜곡, 도덕적 해이, 징세노력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의 노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과 관련된 관심은 어쩔 수 없이 자체재원 그중에서도 지방세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산과세적 조세가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지방세체계에서는 사회복지비 등 급증하는 재정지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과거 가장 안정적인 조세로 인식되던 재산과세가 경제침체기에는 가장 불안정한 조세로 인식되는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지방세체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수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식할 때, 지방재원의 확충은 국세 및 지방세 전체의 조세체계에 대한 변화보다는 단일 세목중심의 미시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소득 · 소비과세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현재의 재정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복지로부터 발생하고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과연 과거와 같이 순증에 대한 변화없이도 유연한 대안모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는 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과거와 달리 중앙의 정책에 집단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의 재정운영을 통제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만성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세의 신장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 여력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유태현, 2012: 292). 이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체계 개선은 그 규모를 확대하기 보다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보조금의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갈등 소지를 줄이고 협력적 상생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임성일, 2012:270). 특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반영이 제한되어 있고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동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듯이 거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지출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재원이 부족하고 세수증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출을 효율화하고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은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현행 지방재정체계에서는 재정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다시말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규모의 확충, 재정분권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 등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관리시스템이 체계화되고 있다.

이는 곧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제고라는 지방분권의 두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방재정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현실의 재정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은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예로 재정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럴 해저드가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입분권과 세출출분권의 차이로 인한 자치단체의 책임성 저하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자주세입권의 확대로 풀어야할 사안이나 아직 원만히 해결된 상황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그 재원의 원천이 어디있든 지방에서 집행되고 창출되는 성과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 측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출수요의 급격한 팽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은 더욱 부각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야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재정관련 문제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산 및 회계운영 방식을 투입 중심에서 성과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재정사업 모니터링과 성과분석 등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식부기제도 등 재정운영 책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사업 관리의 핵심과정 중 하나인 투융자심사제도의 개선도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지방재정을 인식하는 시각은 차별화될 수밖에 없지만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차이는 그 갭이 크고 깊다. 그러나 재정수입의 증가가 제한되고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한 재정지출 수요가 급격히 팽창될 것이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하며, 중앙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복식부기제도와 같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작업반. 2012
-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경제현안 진단, CEO information, 2012. 10
- 유태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세제의 틀 모색,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공동학술대회, 2012. 10.
- 임성일,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의 재정립 방향: 중앙 · 지방간 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공동학술대회, 2012. 10.
- 주만수, 지방소비세의 도입 효과와 증률을 위한 대안모색, 제2차 인천재정포럼, 2012. 11
- 최병호a, 현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한국재정학회 등 2012년 공동학술대회, 2012. 10.
- 최병호b, 지방소득세제의 개편방향과 과제, 제2차 인천재정포럼, 2012. 11

2013년 지역발전의 전망과 과제



김 현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Ⅰ. 서언

올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내년 2월 25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지역발전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과거 전례에 따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대개 연초에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틀을 형성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정책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체계, 지역발전에 대한 특별회계 등을 새롭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제반 사항은 결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위시하여 지역발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정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균특법 체계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되고, 새 정부의 제대로 된 지역발전 정책의 시행은 결국 내년 하반기쯤에 본격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내 일(my job)이 없으면 내일(tomorrow)도 없다" 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존과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한테 주어지는 일자리뿐 아니라 지역형평에 대한 가치도 보다 증가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형평적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무게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제반 요소를 포함하여 2013년 지역발전의 환경변화를 전망해보고,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Ⅱ. 2013년 지역발전의 환경변화 전망

2012년의 지역발전은 대개가 그간의 지역발전정책 분야에서 설계했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의 건설이라든지 세종시의 건설 등 이전의 사업의 추진도 있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신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광역경제권 사업, 초광역 개발권 사업, 기초생활권 사업 등도 포함되고 있다. 아울러 9조여원에 달하는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지역발전사업의 추진도 있었으며, 지역간 연계 및 협력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의 정책적 효과여부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서라도 2013년은 지역발전에 상당한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 변화는 거시적 측면, 지역발전의 내용적 측면, 지역발전의 형태적 측면 등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역발전정책이 인수위를 포함해서 새 정부에서 가다듬어져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먼저, 지역발전의 거시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따른 지역발전의 환경변화가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성장세가 떨어져 IMF를 기점으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1986-1990년 10.1%,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6년-2009년 3.0%, 그 이후 3.0%대에 머물러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또 2010년 고령화율이 11.0%인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체도 붕괴직전에 있는 자치단체가 많아 현재, 인구가 3만이 채 되지 않은 시 · 군이 17개이며, 심지어 2만이 되지 않은 지자체도 양구, 장수, 영양 등 7개에 해당되고 있다(통계청, 2012). 팽창시대를 지나 지역발전의 축소시대가 우리사회가 직면하게 될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런 사정은 팽창시대와 달리 무안 등 신도시 개발이 목포 구도시를 공동화시키는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발전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요청도 이전과 다른 형태를 띠고 나타날 것이다. 종래와 같이 지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행복과 별로 관계없는 '지역개발 자체' 를 위한 시책보다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증진에 직결되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벌써 이런 지역발전의 수요는 외국에서 선행(先行)되고 있기도 하다. 동경도 아라카와구(荒川區)는 와라와쿠의 행복을 중시하는 지역발전정책인 GAH(gross Arakawagu Happiness)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21세기 위원회는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의 지역발전가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지역발전의 대상을 '지역' 에서 '주민' 으로 전환함으로써 장소의 번영(place' s prosperity) 보다는 사람의 번영(people' s prosperity)을 지향하는 요구가 한층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의 형태적 측면의 전환에 대한 요청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지역발전의 상당부분이 아직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집권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 지역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예산 따오기' 성격의 지역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자체예산 규모가 적은 탓도 무시할 수 없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이 돈줄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의 탓에 기인하는 바 크다.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포괄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사업의 자율적인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지방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여전히 많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즉 예산이나 권한의 지방이전에 바탕한 분권적 지역발전에 대한 요청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2013년 지역발전의 대응과제

앞에서 언급한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2013년이나 그 이후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이 증진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발전의 명암과 휘발성은 향후에는 이전이나 현재보다는 보다 극명해지게 될 것이다. 향후에는 지역이 지역발전에 대한 자기 책임성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 공급에서 나아가 주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른바 기업가적 정부를 표방하는 지자체가 보다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대응과제에 더해 국가나 지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지상주의의 지역발전 대신, 국토의 재활용이나 지역재생에 입각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과거와 같은 팽창주의 시대의 양적인 발전의 패러다임은 향후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동안 '개발' 이 곧 '성장' 이고 '발전' 이라는 인식에서 지역이나, 도시, 국가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개발지구가 지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국에 지정된 각종 "개발사업구역" 면적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53여개 종류의 지역개발사업에 국토면적 10만 200㎢의 120%인 12만46㎢에 해당되는 면적이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이(국토연, 2011) 가장 대표적인 보기에 해당된다. 전형적인 성장 및 팽창시대의 포석으로 저성장 시대에 부합되지 않아 서울시 뉴타운지구 철회 등 대부분의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축소시대의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손에 주어지는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을 포함해서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사업들이 추진 된 바 있지만 성과는 소기하는 바대로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갤럽의 Jim Clifton이 전망하고 있듯이 향후 30여년은 "일자리 전쟁" (Jobs War)의 시대가 될 것인데, 국가나 지역발전의 가치도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 이 될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 출생) 712만명 중 임금근로자 312만명의 퇴직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도 일자리를 만드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이 과제가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애로와 함께 일자리의 지역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전국의 일자리 24,244천개 가운데 50.3%인 12,205천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통계청, 2012), 지난 20년간(1991년-2011년) 증가한 일자리 5,595천개 가운데 71.2%인 3,981 천개가 수도권에서 창출되고 있다. 특히 전남은 192천개, 부산은 52천개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기도하다. 따라서 국가나 지역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역공동체 단위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행복과 삶의 질' 을 지향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지역이 소유하고, 지역 스스로가 창의, 발상의 전환, 연구개발에 의해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분권화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의 특별한 고민과 자구노력이 동반되는 3D적 접근, 즉 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개발(development)하고, 차별화(differentiation)를 통해 지역자체를 새롭게 디자인(design)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도 지역의 차별화된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지원, 컨설팅 등의 정책을 통한 조력자,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발전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지역 중심의 통합적(place-integrated) 방식" 으로 기존 지역발전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지역발전의 지배적인 목표가 될 주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인 지역자원의 융 · 복합적 개발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통합적 접근에 의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 자체의 성장동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어떤 식으로든 국가와 지역은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도 보다 강화시키는 시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충남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



안 희 정
충청남도지사

바쁘신 중에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를 경영하시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신 핵심적인 시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3개부분의 혁신을 주창해 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것은 '행정혁신' 이었습니다. 행정혁신은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정운영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 을 통해 우리 충청남도를 원칙과 상식, 민주주의, 공존과 평화를 전제로 한 공직관행 정립과 공부하고 연구하는 혁신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3농 혁신입니다. 여기서 3농은 '농업' , '농촌' , '농어민' 을 말합니다. 저는 이 3농이 혁신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를때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발전은 농업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농 혁신은 단지 농어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 산업, 경제, 마을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융·복합된 과제이기 때문에 농촌 혁신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선호와 생각을 잘 반영하여 자율적 책임 하에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사님께서 지사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난 전반기 우리 도가 이룩한 여러 성과가 있지만, 그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꼽으라 한다면, 첫째 2010 세계대백제전 및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잘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대백제전을 통해 찬란한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국내·외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백제역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잘 아시다시피 백제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공주와 부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2011년 2월에 이들 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우선추진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남을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여 글로벌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계대백제전 기간에 369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서 당초목표였던 260만명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9억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2,399억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서 인삼산업 발전방향과 비전을 설립하였고 현재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 동안에 관람객 262만명이 방문해서 당초목표였던 229만명 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찾아주었고 수출상담도 5,082만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614억원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이들 행사는 우리 충남의 핵심적 프로젝트이자 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몇 대표적인 성과들을 꼽는다면, 충남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우리 충남이 처음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셋째 출산 이상에 대해서 「무상 보육·교육」 동시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입법하기도 하였습니다.

충남의 발전을 위하여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는 "21세기 동북아의 New-Core, 희망찬 충남" 이란 비전 아래, ① 새로운 성장산업 선도, ②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 ③ 품격 있는 지역문화 창달, ④ 지속가능 녹색환경 조성, ⑤ 동북아의 교역허브 구축, ⑥ 활력 있는 지역개발의 6개 정책 분야 22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서 우리 충남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아시아 경제권의 부상과 함께 중국, 일본, 인도를 삼각으로 연계한 교류와 협력의 주역으로 도약하고 대륙, 해양, 항공망을 연계, 메타경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 충남을 한반도 중부권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종시, 내포신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연계시켜서 중부권 성장 동력 창출의 중심지로 부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 · 녹색산업의 융복합 선도를 통하여 북부권 첨단산업과 남부권 생태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계획은 우리 충남을 「문화 르네상스」의 메카로 만드는 것입니다. 백제 · 내포 · 유교문화권 개발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행정체계측면에서 갖는 중요한 장기계획은 국가 혁신을 리드하여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혁신과 분권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경쟁력를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했지만 행복한 농어촌 조성이 중요한 장기계획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3농 혁신을 통한 선순환 체제를 정착시키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공동체가 조성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지사직을 수행하시면서 아쉬웠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래 2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중앙행정권한의 일부 이양, 지방소비세 도입, 주민투표제 도입 등 부분적으로는 성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방" 시대에 지방은 소외되고, "자치" 의 자리에는 "통치" 가 차지하고 있고, "분권" 의 자리에는 "중앙집권" 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8.3% 대 21.7%이고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한 후에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답답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취임초 몰아닥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자식처럼 아끼던 가축을 매몰처리하고 망연자실한 자세로 텅빈 축사를 쳐다보는 도민들의 눈을 바라볼 때 도민의 아픔을 보면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태풍 곤파스 또한 잊지 못할 아픔이었습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행정안전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의원연찬 활동,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입장에서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 20년, 지방자치 15년, 주민자치센터 10년이 되었습니다. 숱한 비바람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방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씨를 뿌리고 가꿔 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뿌리와 줄기를 더욱 튼튼히 하고, 꽃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향후에도 많은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노력과 성과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귀중한 거름과 비료가 되어 주시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지방자치, 근린생활자치의 꽃이 우리 주변에 가득 피어나고, 그 열매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싱크탱크" 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대담 · 정리 : 하 현 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마음까지 녹여주는 따스한 고향 충청남도

매서운 눈보라가 온 세상을 꽁꽁 얼려버리는 겨울. 하지만 한반도의 중앙에서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곳이 있다. 바로 기온이 온화하여 살기 좋은 동네로 명성이 자자한 충청남도다.
충청남도는 경기도 · 충청북도 · 전라도와 경계를 이루고, 서해바다와 면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어 지리적 요충지로 꼽힌다. 신도시 건설과 문화권 개발 등을 통해 동북아의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해양휴양과 관광의 메카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충청남도를 찾아 그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해 보자.

추억과 낭만을 곱게 물들이는 _ 안면도 노을길





겨울바다만큼 애잔하고 감성적인 것이 또 있을까? 소슬한 추억은 파도에 실려 보내고, 새로운 낭만을 품어내고 싶다면 태안 안면도 노을길을 추천한다.
안면도는 본래 곶으로서 육지인 남면과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삼남지역의 세곡을 실어 나르는 것이 불편하자 조선 인조 때 안면읍 창기리와 남면 신온리 사이를 절단하면서 섬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태안반도와 남면반도 사이에 안면대교가 세워지면서 쉽게 여행갈 수 있는 관광지로 재탄생 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수려하며, 소중한 생태자원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바닷길은 안면도의 백사장항에서 꽃지해변까지 뻗어나가는 12.8㎞ 길이의 노을길이다. 백사장항을 시작해 삼봉해안–가지포해변–안면해변–두여해변–밧개해변–두에기해변–방포항–꽃지해변으로 이어진다. 매력적인 것은 꽃지해변을 향해 걷는 내내 바다와 해가 오른쪽에 있다는 점이다. 바다와 태양이 줄곧 따라다니니 홀로 걸어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 걸으면 풍요롭다.
노을길에서는 기지포, 안면, 두여, 밧개, 두에기, 방포 등 8개의 해수욕장과 마주할 수 있다. 때문에 이 길은 평탄하지 않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솟아나고, 사색이 담겨 있다. 보드랍게 발마사지를 해주는 모래언덕과 비탈진 산길, 솔잎이 가득한 흙길, 울퉁불퉁한 자갈길이 걷는 재미를 더한다. 바닷물이 촉촉이 담긴 갯벌에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조개를 캐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밀물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맨발로 바닷길을 건너는 진풍경도 펼쳐진다.
꽃지다리는 일몰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서해안 3대 낙조 명소로 손꼽히는 꽃지해변은 해당화가 많이 피어 '화지(花池)' 라고도 불린다. 할미 · 할아비 바위 사이로 노을빛이 황홀하다. 저물어가는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윤슬이 바다 위에서 춤을 춘다.
지난 2007년 원유 유출 사고로 아픔을 겪었던 태안. 이제 노을길을 통해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주고 있다. 잠시나마 짓눌렸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노을길에서 겨울 향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삶의 이야기와 온기가 살아있는 _ 아산 온양온천마을





신혼여행지라고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 하와이, 괌, 발리… 현대인들이라면 대부분 해외 휴양지를 꼽겠지만, 황혼에 접어든 어르신들은 아산 온양온천을 추억할 것이다. 온양온천은 60~70년대 신혼부부들의 단골코스이자 빼놓을 수 없는 수학여행지 중 하나였다.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백제 때는 온정(溫井), 고려시대에는 온수(溫水), 조선시대 이후에는 온양(溫陽)으로 불리며 1,300여 년의 역사와 함께했다. 조선시대 여러 임금들이 휴양이나 병 치료를 위해 온궁이라는 별장을 지었을 정도로 각별한 곳이다.
1980년대 국내 다양한 관광지가 생겨나고 해외여행이 붐을 일으키면서 한동안 온양온천의 입지가 낮아졌었다. 하지만 2008년에 서울역~천안 아산 간 KTX 고속철과 수도권 광역전철 온양온천역 연장 개통으로 다시금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역에서부터 39분이면 도착하니 온천여행을 떠나기에 더할 나위 없다.
온양온천은 왜 이토록 사랑받아 왔을까? 온양온천은 온도 44~57℃, pH 9.15의 알칼리온천수이다. 피부미용 및 각종 질병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맑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일상의 피로가 말끔히 씻겨 나간다.
온양에서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온천마을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라는 것이다. 2009년 공공미술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낡고 칙칙했던 거리가 개성 있는 작품으로 거듭났다. 시민들의 참여가 더해져 의미 있는 디자인도시로 빛나고 있다.
삶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마음의 고향 온양온천마을! 그 옛날 왕이 머무르던 쉼터이자 신혼부부가 미래를 약속했던 출발지인 온양온천을 찾아 온기를 온몸으로 느껴보길 바란다.

정리 (주)소프트하우스 www.e-softhouse.com

청정한 자연환경과 향토문화가 어우러진 장수의 고장, 순창

1. 2012년도 순창군의 주요 사업 성과

■ 순창의 희망이요 자부심으로 미래 순창 인재의 보고인 『옥천인재숙』

맑은 물이 넘쳐 흐른는다는 뜻의 순창의 옛 이름인 옥천(玉泉)에서 이름을 딴 『옥천인재숙』 지난 2003년 순창군이 인구유출 방지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현재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순창군 관내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중2, 3학년 고1,2 학년)을 대상으로 우수한 학생 200명을 선발하여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공립 기숙학원이다.





『옥천인재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충실하게 기본적인 학습을 마친 후, 『옥천인재숙』에서 방과후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학교교육과 『옥천인재숙』의 방과후 학습이 조화를 이루어서 2006년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옥천인재숙에서는 현재까지 서울대 합격생 7명을 비롯해 매년 수도권 대학에 20여명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올해에는 49명의 수료생 가운데 서울대1명, 연세대2명, 고려대 3명, 성균관대 3명, 서울 시립대 2명 등 수도권 명문대학에 무려 27명이 합격했으며, 전북대, 전남대 등 지방명문대의 합격자도 10명에 달하고 있다.

■ 60억원을 벌어들인 제7회 순창 장류축제





3년 연속 문화관광체육부 지정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된 순창장류축제가 2012년 11월 2일부터 사흘간 "천년의 장맛, 백년의 미소" 라는 슬로건을 걸고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일대에서 열렸다.
2012년으로 7회째를 맞이한 장류축제에는 순창군민을 비롯하여 외국 관광객 다수가 포함된 30만명이 참가하여 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장류축제에는 작목반과 읍면별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장류제품 판매부스를 질서정연하게 운영해서 축제장을 찾은 외부방문객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준비된 축제, 돈 버는 성공적 축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귀농 · 귀촌하고 싶은 순창 만들기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대도시민들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2012년 초부터 전 공무원이 하나 되어 노력하였다. 군민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다정하고 따뜻한 이웃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2012년 9월 11일에는 귀농 · 귀촌 T/F팀을 신설하고, 귀농귀촌인들에게 배포할 '순창이 좋다' 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귀농 · 귀촌 가구에 대해서는 이사비, 주택수리비, 소득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순창군민과 공무원이 일체가 되어 팔을 걷어 부친 결과 2012년 한해만 186세대 386명명이 순창군에 정착하게 되었다.

■ 기업하기 좋은 순창 만들기

기업의 유치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순창의 인구로 증가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순창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 순청군은 2012년 한국씨엔티 등 4개업체를 유치해서 100여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순창군 농공단지 내 기업체의 총 생산액도 1,520억원으로 지난해 1,300억 보다 220억원이 증가되었다.
현재 순창군에는 가남, 풍산, 인계 등 3개의 농공단지가 모두 분양됨에 따라 잇따르고 있는 기업의 입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계 쌍암과 풍산 죽전에 추가로 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 장수 마을, 맛있는 장류, 인재 배출의 비결이 되는 순창의 물

순창의 옛 이름이 옥천(玉泉)이라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순창은 깨끗하고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물이 넘쳐나는 고장이다. 순창군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강천산 온천공 3공(음용수 1, 온천수 2)을 개발했으며 3공의 온천수를 성분 분석한 결과 수온 26.2℃~39.8℃, 일일 적정양수량 1334톤으로 손색없는 온천수라는 판정을 받았다. 순창음용온천수는 한국물학회가 추천한 '2011년 한국의 좋은 물' 로 선정된 뒤를 이어 연속으로 2012년에도 한국의 좋은 물로 선정되어 전국

410개소의 온천 중 음용수부분에서 맛과 기능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물 1㎖당 1-2억개의 수소 또는 산소 나노기포가 함유되어 있는 "나노 산소수" 와 "나노수소수" 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고 한국물학회로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한국의 좋은 물" 로 선정된 나노버블수(사장 : 이장환)가 순창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받으며 순창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질 좋은 순창의 음용온천수를 "나노버블수" 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다. 순창군 보건소에서는 음용온천수를 활용한 나노버블음료를 2012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보건소를 이용하는 순창군 관내 중증 당뇨환자 20명에게 시음토록 한 결과 상당수 당뇨환자의 혈당수치가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2. 2013년도 순창군의 주요 역점사업

■ 순창의 음용온천수에 날개 달기

순창에 정착하게 된 "나노버블수" 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순창음용온천 나노버블수' 를 다방면에 걸쳐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특허를 받은 천연소재를 이용한 나노버블(기포) 발생기술을 응용하여 순창의 특산물을 가공한 건강기능성음료와 식품을 개발하고 음용온천 나노버블수를 가축에 먹여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성장 발육을 촉진하는 동시에 고기의 질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당뇨, 고협압, 아토피 등 만성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돕는 의료기술 분야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최초로 '물산업팀' 을 설치하여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물 관련 산업을 순창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순창군에서는 나노버블수의 다양한 효능 및 접목분야 연구지원과 나노버블 기술분야 산 · 학 · 연 · 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원광대학교 대사성질환연구소 등과 MOU를 체결하였다.

■ 살기 좋은 농촌마을 순창 만들기

2013년에는 누구나 와서 살고싶은 순창, 살기좋은 순창을 만드는데 더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2억3,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귀농 · 귀촌자 1800명 유치, 전국적인 귀농 · 귀촌 모델 육성, 귀농 귀촌학교 학생 250명 유치 등의 사업을 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순창읍 100억, 복흥면 50억을 투입해 오는 2014년까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쌍치와 구림면에도 각각 50억원씩을 투입해 오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개량, 지붕개량, 빈집철거, 슬레이트 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2억1,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군립도서관, 영화관 건립으로 군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그동안 순창군에는 군립도서관이나 영화관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이 소외되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순창은 지리적으로 인근 광주나 전주 등 대도시와 1시간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13년에는 군립도서관 건립에 36억, 영화관 건립에 21억을 각각 투입하여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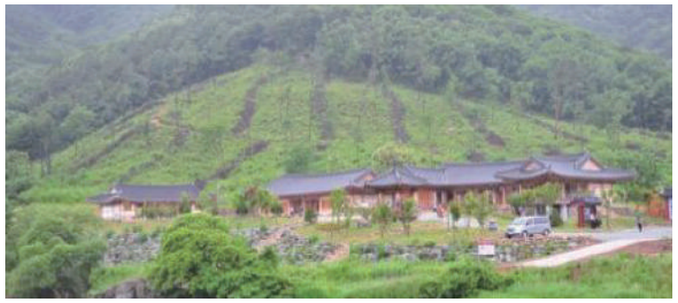
■ 섬진강~영산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완공

섬진강~영산강을 연결하는 자전거길은 최초로 섬진강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코스로, 섬진강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21km 구간에 걸쳐 조성될 자전거도로는 2013년 연말 완공예정이다. 자전거도로가 완공되면 아름답고 맑은 섬진강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자원을 제공해 순창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순창의 전통 문화유산의 복원과 활용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인 순창군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리기 위하여 순창의 전통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각 면마다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농악을 활성화시키고 국악의 명인과 시조의 명창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이들을 장류 축제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순창이 낳은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이 후학을 지도한 "훈몽재" 를 복원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훈몽재의 옛터가 조선 중기 호남 성리학을 이끈 하서 김인후 선생의 교육과 관련된 유적으로, 전북지방 유학 발달사에 있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아서 최근 전라북도의 문화재 자료(제189호)로 지정됐다.





순창군은 지난 2009년에 훈몽재를 중건하여 한학과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문학, 한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 연구자, 교수 등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훈몽재" 를 "선비수련원" 을 확대 발전 시켜서 전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필 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자치 정도 추이

-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 대표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지표로는 재정자립도[1]가 있으며, 국가예산대비 지방예산 비율, 중앙정부의 지방이전 재원 규모, 자치단체 채무현황, 지방교부세 현황, 지방세 현황등으로 지방자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 협력 관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자체적인 재정수입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써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2년 52.3%로 감소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성향에 반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군지역을 제외하고 특·광역시, 시·도,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체수입의 증가에 비해 의존수입 증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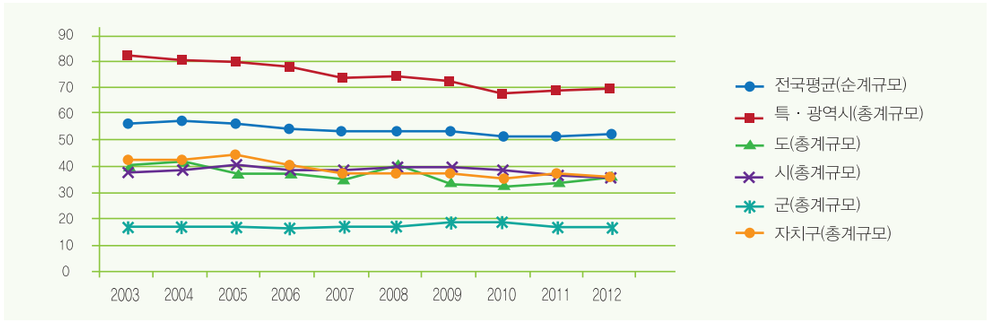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평균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51.9	52.3
특·광역시	82.2	81.4	80.3	78.5	73.9	73.8	72.7	68.3	68.6	69.1
도	39.4	41.3	36.6	36.1	34.9	39.5	33.3	31.6	33	34.8
시	38	38.8	40.6	39.4	39.5	40.7	40.7	40	38	37.1
군	16.3	16.6	16.5	16.1	16.6	17.2	17.8	18	17.1	16.4
자치구	42.3	42.6	44.3	40.5	37.5	37.1	37.3	35.4	36.6	36

1) 또 다른 대표적인 성과지표로는 투표참여율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량지표의 파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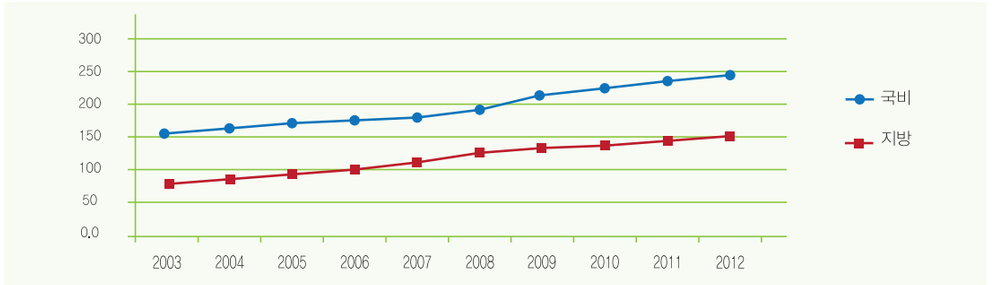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한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의 비율은 국가재정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대비 2012년 국가예산은 연평균 6% 증가한데 비해 지방예산은 8.6% 증가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
  - 반면, 국가예산에 대한 지방예산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완전한 자립은 아직 미도래된 것을 의미하며 지방재정규모는 아직까지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단위: 조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	계	233.8	246.7	259.7	276.8	288.8	320.1	355	365.8	376.6	399.7
	국가	155.7	159.4	167.3	175.4	176.8	195.1	217.5	225.9	235.6	248.6
	지방	78.1	87.3	92.4	101.4	112	125	137.5	139.9	141	151.1
구성비 (%)	국가	66.6	64.6	64.4	63.4	61.2	60.9	61.3	61.8	62.6	62.2
	지방	33.4	35.4	35.6	36.6	38.8	39.1	38.7	38.2	37.4	37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추이〉



● 반면,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 및 지방이전재원규모는 증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자원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재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지방이전 재원과 지방세와 지방이전재원으로 구성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총액인 지방가용 재원은 2003년에 비해 각각 95%, 86% 증가함

– 또한, 총조세 대비 지방가용재원은 점차 증가하여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 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지방이전 재원 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이전재원	53.2	54.2	59.5	65.6	73.3	84.8	90.8	89.6	95.9	103.5
– 교부금	32.1	32.8	43.8	46.1	52.1	59.7	58.9	59.7	65.5	71.4
– 양여금	9	8.6	–	–	–	–	–	–	–	–
– 국고보조금	12.1	12.8	11.3	14.8	15.6	19	24.9	23.6	24.2	26.1
– 광특회계	–	–	4.4	4.7	5.6	6.1	7	6.3	6.2	6
지방가용재원	86.3	88.4	95.5	106.9	116.8	130.3	136	138.8	148.3	160.1
총조세 지방가용재원 비율(%)	58.5	58.2	58.8	59.6	57	61.2	64.9	61.2	60.5	61

〈지방이전 재원 규모 추이〉



● 따라서, 지방자치이후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는 재정구조가 취약하며 자구노력 등의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방가용재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정도가 증가함

– 또한, 지방예산의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감소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활성화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박 승 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정기간행물 발간

● **지방행정연구지 발간**

– 2012년 12월호(통권91호)

● **KRILA FOCUS (11월호)**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발전 방안(류영아)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